

##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4년 8월 10일 (화)  
석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e 2004 KDI-KAEA Conference ON "Current Economic Issues of Korea"

## 국 제 회 의

- 일 시 : 2004년 8월 10 (화) 09:00 ~ 18: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중회의실 & 대회의실
- 공동주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미경제학회(KAEA)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3년, 한미경제학회(KAEA)와의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내 학자까지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제2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인구구조의 고령화, 금융규제개혁, 기업 및 경쟁정책, 생산성, 통화 및 재정 정책, 거시경제 정책, 소득분배 및 경제성장의 주제를 포괄하는 총 20편(한국개발연구원 8편, 한미경제학회 6편, 국내경제학자 6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 금번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국내 학자와 재외 학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해법과 제도약을 위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문의 : 윤호중 958-4257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The 2004 KDI-KAEA Conference**  
**on**  
**"Current Economic Issues of Korea"**

[VENUE A: KDI 대회의실]

08:45-09:00 Registration & Networking

**Session I: Population Aging**

사 회: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09:00-09:40

발 표: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An Analysis on the Recent Korea's Fertility Drop"  
토 론: 전영준, 인천대학교

09:40-10:20

발 표: 임병인, 보험개발연구원, "Population Aging and its Effect on the Inequality:  
An Extended Empirical Study of the Kuznets' Inverted U-hypothesis"(공저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토 론: 김대일, 서울대학교

**Session II: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I**

사 회: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

10:20-10:30 Coffee Break

10:30-11:10

발 표: 박강훈, Southeast Missouri State University, "Performance of Korean  
Banks and Implication for Regulatory Reforms"  
토 론: 차백인, 한국금융연구원

11:10-11:50

발 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함준호, 연세대학교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토 론: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11:50-12:30

발 표: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Risk and Capital Regul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easuring credit risk of SME loans" (공저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

토 론: 정지만, 상명대학교

12:30-14:00 Lunch

### Session III: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II

사 회: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14:00-14:40

발 표: 도보은, 금융감독원, "Does Bank Structure Matter?"

토 론: 함상문, 한국개발연구원

14:40-15:20

발 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Systemic Risks: Macro and Micro Evidence in Korea"

토 론: 임준환, 서강대학교

15:20-15:40 Coffee Break

### Session IV: Corporate Affairs & Competition Policy

사 회: 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

15:40-16:20

발 표: 송원근, 진주산업대학교, "On the Insider Trades of SK Chaebol"

토 론: 성태운, KAIST 경영대학원

16:20-17:00

발 표: 박홍열,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The Grand Unified Theory of the Firm and Corporate Strategy Measures to Build Corporate Competitiveness" (공저 신근철, 경희대학교)

토 론: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

17:00-17:40

발 표: 박인옥, University of Pittsburgh, "The Market for Liars: Reputation and Auditor Honesty" (공저 Andre McLennan, University of Minnesota)

토 론: 윤기호, 고려대학교

17:40-18:00 **Wrap-up Session**

## [VENUE B: KDI 중회의실]

08:45-09:00 Registration & Networking

### Session I: Productivity

사 회: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09:00-09:35

발 표: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Korea's Response to Competitiveness Challenges"

토 론: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9:35-10:10

발 표: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Productivity and Patterns of Trade- The Experience of Korea"

토 론: 한진희, 한국개발연구원

### Session II: Monetary and Fiscal Policy

사 회: 황해신, Texas A&M University

10:10-10:45

발 표: 김인배, 숭실대학교, "How the Exchange Rate Regime Has Been Switched in Korea: A Public Choice Inquiry" (공저 김일중, 숭실대학교)

토 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10:45-11:20

발 표: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as Target of Monetary Policy"

토 론: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1:20-11:55

발 표: 윤여민, Seton Hall University, "Enhancing 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nd Fiscal Policy" (공저 Rober W. McGee, Barry University)

토 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11:55-12:30

발 표: 김윤배, University of Kentucky, "Exchange Rate Targeting and Economic Stabilization" (공저 James Fackler, University of Kentucky/ Larry Filer, Old Dominion University)

토 론: 김장렬, 한국개발연구원

12:30-14:00 **Lunch**

### **Session III: Macroeconomic Issues**

사 회: 이영섭, 숙명여자대학교

14:00-14:40

발 표: 정진호, 경남대학교, "The Dynamics of Korean Stock Market in Response to Fiscal and Monetary Shocks Around Foreign Currency Crisis"

토 론: 조성훈, 한국개발연구원

14:40-15:20

발 표: 김성현, Tufts University, "Dynamic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Role of External Shocks" (공저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양준모, 연세대학교

15:20-15:40 **Coffee Break**

### **Session IV: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사 회: 이영선, 연세대학교

15:40-16:20

발 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A New Look at Korea's Development Policy: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Truth or Fallacy?"

토 론: 박원암, 홍익대학교

16:20-17:00

발 표: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Short-run versus Long-run Income Inequality"

토 론: 최강식, 연세대학교

17:00-17:20 **Wrap-up Session**

## VENUE A : KDI 대회의실

### [Session I : Populating Aging]

#### 1. An Analysis on the Recent Korea's Fertility Drop

#####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관한 분석

: 최경수 (KDI 연구위원)

출산율은 인구구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도 출산율의 하락에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하락은 시기적으로 외국보다 늦었으나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2002년 1.17명, 2003년 1.13명이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모색하여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변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늦었으나 출산율의 하락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그 변화 양상은 외국에서의 과거 추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뒤늦은 하락과 급속한 하락을 선진국에 비하여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으며 고도성장의 결과 소득상승의 속도는 빨랐다고 하는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또한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추이는 199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추세가 지속되었으며 더구나 1990년대 말부터는 출산율이 급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혼인과 초산연령의 상승을 수반하고 있으며 고학력자일수록 출산시기가 늦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학력상승의 출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학력의 상승은 최근의 출산율 하락과 1990년대 초의 출산율 상승 등 출산율 변화의 양상과는 일치하나 그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현재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라는 설명 역시 경제회복기에도 출산율은 하락하였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출산율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최근의 출산율 급락은 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에 의하여 초래되었으며, 1998년 이후 20대 후반 여성의 취업률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20대 후반,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출산에 따른 기대비용의 증가는 최근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유력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2. Population Aging and its Effect on the Inequality: An Extended Empirical Study of the Kuznets' Inverted U-hypothesis

: 임병인 (보험개발연구원)

본 논문은 패널자료분석방법, inverse logistic function 추정방법, 비모수적 커널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고령화가 소득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index)는 Luxembourg Income Study(LIS)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고령화지표로 사용된 노인 부양비와 다른 변수들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3 (WDI2003)에서 구하였다.

분석결과 일인당 GDP와 지니계수 사이에는 양의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즈네츠의 역 U 자 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하며,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분배상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비가 세후 지니계수(세후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전 지니계수(세전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발전 혹은 인구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Performance of Korean Banks and Implications for Regulatory Reform

한국은행실적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 박강훈 (Southeast Missouri State University)

은행분야의 구조와 실적관계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되는 가정이 있다. "시장구조" 가정에 따르면 집중된 시장에서 은행들은 그들의 시장 장악력을 통해 높은 대출이자율과 낮은 예금이자율을 부과하고, 이는 담합비용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가능케 한다. 이에 반해, "효율적 구조" 가정에 의하면 효율적인 은행들은 보다 높은 수익율과 보다 많은 시장점유율을 갖는데 이는 그들의 효율성으로 보다 집중된 상태의 시장에서 우월함을 갖게 한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을 분석해 왔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두가지 가정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합하여 통합된 모델 하에서 이 대립되는 가정들을 실험함으로써 1992-2000기간동안 한국은행분야에서 수익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함이다. 전국 및 지역은행 패널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의 은행 실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시장구조와 효율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가장 특이점은 방향적 기술 거리 함수(directional technology distance function)에 의해 배분적인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이 측정치를 이용해 은행의 실적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은행 수익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기여하였다. 외환위기 전 '시장집중도', '시장점유율', '시장효율성'의 세가지 변수가 주요 설명 요소였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자산비율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은행규제개혁에 대한 다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2.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 금융그룹화에 따른 금융위험 변화와 감독부문의 과제

: 김준경 (KDI 선임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금융그룹화의 현황 및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스템의 위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감독기능의 확충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에 있어 금융그룹화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위험 상승을 수반할 가능성
    - 금융그룹간 경쟁압력 상승으로 시장지배력 증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적 통합 및 겸업화를 통한 위험분산 효과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 단기자금 등 금융거래를 통한 상호 신용위험 노출, 자산 및 수익구조의 동질화 등으로 대형 은행그룹간 직·간접 상호의존도는 점차 심화
    - 더불어 규제유예의 기대, 시장규율의 저하 등에 따른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선호도 상승, 겸업화에 따른 비은행·비금융부문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금융그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감독기능이 더욱 확충될 필요
- (1) 개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능 확충
- 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룹 내부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감독당국의 위험관리 전문성 확충
  - 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등 그룹 내의 위험 집중과 은행 자회사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 장치 강화
- (2)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중심 연결감독 강화
-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금융그룹 연결감독을 여타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경제적 동일체에 대한 연결 감독이 가능토록 감독기능 확충

- 연결재무정보에 기초하여 전체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회사간 위험요인의 전이 및 파급 가능성을 고려한 자기자본규제 등 위험중심 건전성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감독을 강화
- 금융그룹의 상시감시 및 감독을 위한 감독당국 내 인력 및 조직 확충

(3)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대마불사 및 규제유예 기대의 불식

- 금융그룹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최소비용원칙의 보다 엄격한 적용 등 감독당국의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체계 구축
- 특히 비은행 자회사 등에 대한 공적 안전망의 실질적인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4) 금융그룹의 공시 강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제고

-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모니터링 유인 및 능력 확충
-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건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감독제도 도입

(5) 시스템위험의 조기 인지 및 효율적 통제를 위한 규제기관간 협력체계 확립

-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유, 상시 모니터링, 사전 통제 및 유사시 정책 공조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기구, 재경부, 한국은행 등 공적 규제기관간 협의체 설치 운영

### 3. Risk and Capital Regul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easuring credit risk of SME loans

: 김현욱(KDI 연구위원), 박창균 (KDI 연구위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여신의 위험구조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임.

각국의 금융감독체제에 있어서 자본규제 관련 현안과제는 '금융 겸업화에 적합한 자본규제 구축'과 '신BIS자기자본규제협약(Basel II)의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예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금융법 제정방안이 은행·증권·보험 간 겸업금지원칙의 유지를 표명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Basel II 도입에 대한 준비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Basel II는 현행 BIS자본규제(Basel I)와는 달리, 동일한 규모의 기업여신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최소자본금 수준을 크게 차별화하는 등, 자본규제를 보다 위험관리에 민감한 구조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최소자본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Basel II 도입의 선결과제로 대두

현재 Basel II 협약안에서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을 대기업 여신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은행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음.

Basel II 협약안은 중소기업 대출 간 신용위험의 상관관계가 대기업 대출의 경우보다 낮다고 가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여신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Basel II 도입 이후 은행의 자본부담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 신용경색 가능성을 우려해 왔음.

\* 이에 따라 Basel II 협약안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00만유로 미만의 소기업 대출을 소매여신으로 구분하여 더욱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동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중소기업 여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부담이 현재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금융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Basel II 협약안이 제시하는 방안이 국내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위험에 대한 은행의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 위험이 높아지게 됨.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최소자본금을 산출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험가중치를 Basel II 협약안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Basel II 협약안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기업의 규모가 작은 (즉, 소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일수록 신용위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신용위험 상관관계의 하향 조정' 및 '소매여신으로의 구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는 Basel II 협약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중소기업 신용위험의 상관관계가 산업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주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구체적으로, 차주 중소기업이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도록 조치할 필요

## [Session III :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II]

### 1. Does Bank Structure Matter?

은행구조의 경제적 의의

: 도보은 (금융감독원)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대형화의 경제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은행시스템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의 구조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정보의 외부효과(information externality)와 경제 발전단계(stage in economic development)에 따라 최적 은행산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경제개발 초기나 선진 경제에서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중진개발 경제에서는 경쟁적 은행구조가 자본축적에 유리하였으며, 또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질수록 독점적 은행구조가 자본축적에 유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독점적인 은행구조, 즉 은행대형화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최근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완화나 인수합병 촉진법 제정 추세가 타당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2.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Systemic Risks: Macro and Micro Evidence in Korea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실증분석

: 강동수 (KDI 연구위원)

자귀회귀분석(VAR)을 이용하여 외생적 충격(external shocks)을 분리한 결과, 1997-98년 외환 및 금융위기 당시의 외생적 충격은 통계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로 추정되었음.

\* 당시 발생한 연속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은 0.01% 이하의 확률로 발생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외환위기를 제외한 기타 금융불안은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만한 충격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예를 들어, 2003년 중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1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연속적 충격으로 추정됨.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조적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은 주로 거시적 충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나 수익성보다 실질GDP, 콜금리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자금조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과 상이한 결과임.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시적으로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시적 자금상황에 따라 신용할당을 실시하였던 과거 우리나라 신용공급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금융기관의 자산구조는 시계열(time-series)보다 횡단면(cross-section)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별 자산구조는 시계열상으로 동행(co-movement)하는 패턴이 나타남.

\* 금융기관별 자산구조의 횡단면상 유사성 및 시계열상 동행성은 금융기관이 개별적인 충격보다는 거시적인 공동 충격에 노출됨에 따른 금융기관의 herd behavior를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1. On the Insider Trades of the SK Chaebol

: 송원근 (진주산업대학교)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다른 대규모 재벌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한 SK재벌은 신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발생한 SK글로벌 사태를 계기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재벌의 성장은 일차적으로 계열사 수나 영위 업종의 변동, 자산, 매출액 등 외형적인 재무지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의 배경에는 동일 계열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벌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상품이나 용역뿐 아니라 계열사 출자나 계열사간 주식소유, 그리고 채무보증 등과 같은 자본 및 자금의 내부거래, 그리고 인력의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상품 및 용역의 내부거래에 국한한다.

SK 재벌의 계열사간 내부상품 거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SK재벌 전체의 상품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30%에 이르며, 이것은 외환금융위기 이전보다 평균 10%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효과로 수직계열화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SK 재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 이후 내부매출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정보통신 계열사와 이들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매출 증대 때문이다.

둘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등 기업형태별로는 외환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4개 년도 평균 내부매출비중은 상장기업이 등록기업이나 외감기업보다 높아 내부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룹 내 매입기업들과 가스판매회사들을 제외하면 외감기업의 내부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2002년 말 등록기업의 평균 내부매출 비중은 49.0%를 기록하였으며 동 비율은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외감기업 대부분과 SK건설, SK엔론을 제외한 등록기업 대부분이 정보통신 분야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정보통신 기업들의 높은 내부매출 비중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보통신 계열사 확대와 이를 통한 재벌의 성장에는 정보통신 계열사들의 내부매출과 매입거래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환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내부매출 비중의 급격한 상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일시적인 폐지로 인한 계열사간 출자비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설적 주장은 소유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해 보아야 더 분명해 질 것이다. 기초적인 분석 결과 SK재벌의 경우, 상품 내부거래의 규모와 비율은 거래기업간 소유 구조와 그 변화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계

열사 지분소유의 일차적인 목적이 관련 사업분야 계열사들의수직통합과 네트워킹을 통한 비용감소나경쟁력 증대보다는 신생 계열사 지원이나 그룹 총수 혹은 그룹 2세들의 그룹 내 지배력 확장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The Grand Unified Theory of the Firm and Corporate Strategy Measures to Build Corporate Competitiveness

기업경쟁력 구축을 위한 기업전략에 대한 통일거대이론

: 박홍열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하다. 이 분야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신고전주의,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자원이론, 진화이론 등. 이러한 이론들은 기업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느 이론도 기업 본질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없다. 경제학자들은 포괄적이며 결속력 있는 단일된 이론을 찾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에서 저자는 기업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기업통일이론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여러 실험적인 증거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 3. The Market for Liars: Reputation and Auditor Honesty

거짓말쟁이를 위한 시장: 명성과 감사원의 정직

: 박인욱 (University of Pittsburgh)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두 종류의 금융 감사원에 대한 모델에서 시작한다. 그 중 한 명은 이미 "정직한 감사원"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이때 우리는 "이중의 균형점"을 갖게 되는데, 이 모델에서 명성있는 감사원은 자신의 명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해 고객이 제시하는 뇌물을 거절하는 반면, "명성이 없는 감사원"은 뇌물을 거절해도 명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게 된다. 이 모델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1) 정직한 감사원은 보다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거기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명성 쌓기에 도움이 되고, 2) 정직한 감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성있는 감사원들이 제시한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뇌물을 거절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며, 3) 만약 정직한 감사원의 수가 상위 균형점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의 "이중의 균형점"을 존재하지 않으며, 4) 따라서 명성메카니즘은 정직한 산업으로의 진입으로 약화될 수 있으며, 5)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상위 균형점을 상승시킨 것이다.

## VENUE B : KDI 중회의실

### [Session I : Productivity]

#### 1.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Korea's Response to Competitiveness Challenges

: 서중해 (KDI 연구위원)

한국의 전자산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군이 존재하는 반면 나머지 기업군은 기술적으로 매우 열악한 불균형 구조 혹은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전자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 가전과 같이 가격요인이 경쟁요소로서의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함.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술, 대규모 투자 등 비가격요인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신기기부문에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부문 간 격차 및 부문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전자산업의 이중구조는 향후 전자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경영전략을 구사하는 선도대기업은 부품조달을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하위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산업전체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의 정책이 이중구조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또한 특화된 전문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

## 2. Productivity and Patterns of Trade-The Experience of Korea

### 생산성과 무역 성과 - 1990년대의 한국 경제의 경험

: 차문중 (KDI 연구위원)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의 산업성장, 특히 생산성의 향상과 수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총요소생산성(TFP)은 개별 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고도의 성장을 이룬 전기전자산업 · 자동차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의 가파른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1990년대 후반까지 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자본의 축적을 대체하는 성장요인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IT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서 CEPII 비교우위 (RCA) 지수 역시 1998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음이 밝혀졌으나,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의 성장이 국내 산업의 비교우위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 3국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수출성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산업 중 1990년대 총요소투입의 빠른 증가를 보인 산업이 대체적으로 높은 대일본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나, 높은 대중국 수출증가를 기록한 산업은 총요소생산성과 총요소투입의 증가가 모두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한-중, 한-일의 경합에 관해 분석하고 생산성의 변화가 이 경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은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산업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경합의 정도는 특히 총요소투입이 빨리 증가하는 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과의 경합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와는 거의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총요소투입의 높은 증가를 경험한 산업의 경우, 그 경합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의 한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첨단 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한국이 중국과는 전 산업에 걸쳐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첨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아직 일본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 [Session II : Monetary and Fiscal Policy]

### 1. How the Exchange Rate Regime Has Been Switched in Korea: A Public Choice Inquiry 한국의 환율제도 변화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 김인배 (숭실대학교)

공공선택이론은 법이나 제도가 관료들의 사적유인에 의해 내생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199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실행되었던 '시장평균 환율제도' 역시 그러한 관료적 유인에 의해 도입되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일회적 사건인 어떠한 제도변화의 저변에 그러한 관료적 유인이 스며들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환율정책 당국이 단기적 환율변동성을 줄이거나, 혹은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환율수준을 조정하는 데에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러한 관료의 재량에는 환율의 변화방향과 관련한 여러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이를 통해 사적인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관료유인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혹자는 한국의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중간단계(phase-in)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과는 Kaplow(1986)가 역설한 바와같이, "중간적 제도는 충격흡수의 역할보다는 사회효율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이런 점에서 Sachs(1999)나 Grier and Grier(2001)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1990년에 시장평균 환율제보다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나았으며, 그러한 중간적 환율제도가 1997년 한국에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 2.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as Target of Monetary Policy

: 허석균 (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채권시장을 통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경제주체의 통화정책의 변화 및 경제의 충격에 대한 반응속도가 차별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자율의 기간별구조가 과거의 통화증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가짐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추정식을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 그 결과 특정한 형태의 이자율 기간별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통화정책은 경로 의존적 속성을 지니게 되며 일정한 정책시차가 소요됨을 보여준다.

### 3. Enhancing 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nd Fiscal Policy

#### 정부예산 및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 윤여민 (School of Business, Seton Hall University)

정부예산과 재정정책의 효율성 문제는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정부가 필요한 자원을 징수하고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끝에는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을 공작자들이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알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효율성 제고는 이성적인 생각이기에 이러한 시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효율성을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처럼 사고한다. 이들의 사고체계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부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정부는 정부 자체의 자원을 갖고 있지않다는 점이다. 그 자원이 무엇이 됐든, 처음에는 누군가에게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기업체에게서 자원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생각일까?

본 보고서는 이 문제를두가지 시각에서 분석한다. 우선 지난 수년간 이루어져 왔던 효율적인 예산과 재정운영을 위한 방법들을 분석하고, 그 후 또 다른 시각으로 저효율성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을 논의한다.

#### 4. Exchange Rate Targeting and Economic Stabilization An Empirical Exploration 환율목표와 경제안정화, 실험적인 분석

: 김윤배 (University of Kentucky)

본 보고서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양극적인 제도에 대한 비교보다는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환율개입을 포함한 금융분야의 구조분석에 대한 VAR 모델은 선진 5개국 분석을 위해 만들어 졌고, 브레튼우드 시기 이후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IRF 결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몇 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반응이었음에 불구하고 환율개입은 효과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반증적인 분석으로 중앙은행이 이미 설정된 환율변동폭 내에서 환율변동을 제한하는 실험을 하였다. 각각이 다른 변동폭 속에서 체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는 외화 보유고였으며, 좁은 환율변동폭에서 가장 변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넓은 환율폭 속에서 얻어지는 큰 폭의 환율변동은, 이자율, 생산, 물가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율안정은 반드시 이자율 안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안정적인 환율정책은 외채가 많은 국가의 경우 순수한 내수시장 관점에서는 복지증진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 [Session III : Macroeconomic Issues]

### 1. The Dynamics of Korean Stock Market in Response to Fiscal and Monetary Shocks Around Foreign Currency Crisis

: 정진호 (경남대학교)

본 연구는 거시경제 정책의 충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1982년 1월 부터 2000년 12월까지 거시경제 자료와 주식시장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통화 정책의 충격과 재정정책의 충격,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을 완전정보 최우 추정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추정 후 분석하였다. 완전정보 최우 추정법은 특히 생성된 독립변수로 발생하는 추정상의 문제와 연립방정식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통화 정책의 충격에는 효율적으로 반응하나 재정정책의 충격에는 비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이후 거시경제의 충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경로가 이전보다 더 민감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개방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 2. Dynamic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Role of External Shocks

### 한국 경기순환의 역동성: 외부쇼크의 역할

: 김성현 (Tufts University)

일반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작은 경제에 대한 외부쇼크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기순환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교역구조와 세계 실질이자율과 같은 외부쇼크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교역조건의 향상은 투자, 생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계 실질이자율 하락은 투자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외부쇼크는 한국의 경기순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 [Session IV :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 1. A New Look at Korea's Development Policy: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Truth or Fallacy'

차별화와 집중원리가 경제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평등주의적 민주주의가 한국 경제 정체의 원인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지난 15년 남짓한 동안 한국의 정치 민주화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폐쇄적이었던 근대 조선왕조는 이제는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실 1997년과 1998년의 잠깐이었지만 견디기 어려웠던 시기만 제외하면 한국의 발전동력이 가까운 장래에 소멸될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경제적 전환기에 많은 이들은 한국인의 열정과 근면함이 특히 대외개방적인 시장경제, 그리고 급속한 정치 민주화와 함께 한국을 곧 부러워할 만한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들 관망하고 있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자신만만해 할 일은 아니라고 보며 아무리 자명해 보이는 기본전제들이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했었는가라는 것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경제논리가 정치와 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할 때 이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기보다는 한국경제와 정치철학에 얽힌 좀더 복잡 미묘한 사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는 한국이 소위 평등주의라는 정치논리의 덩어리에 걸려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나라는 부지불식간에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현대 경제학 그 자체가 평등주의로 포장하려는 성향이 있다. 특히 한국적 민주주의는 더욱더 평등을 지향해 왔고 따라서 정부정책들 역시 더욱더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정책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획일화하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경향을 더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

나는 재앙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처한 위험에 대해선 빨리 명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년 이상 한국경제에 대해 고민해온 나의 경험이 옳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위급한 현실 상황을 한번쯤 염려해 볼 필요가 있다. 좀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 비유를 들면, 경제발전은 정치경제 체제 속에 수직적 사다리가 안정되게 놓여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개인들이 그 사다리 위 부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회 전체는 틀림없이 발전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사

람들은 사다리의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개인들이 사다리 위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서 얻은 과실을 거둘 수 있고 그 사다리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득의 불균등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셰익스피어 역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 결과도 좋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언급하는 경제성장의 원칙이다.

불행히도 모든 이들이 이러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고 또 그러한 정치이념에 익숙한 이들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평등주의는 점점 더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그러한 평등주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평범한 한 개인은 반드시 다른 평균의 사람들과 똑 같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튀는 사람은 그저 의심과 배척의 대상일 뿐이다. 사실 평등주의는 한국 정서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성장보다는 재분배를 우선하는 현재의 시대적 풍조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사실, 한국이 모든 정력을 성장보다는 재분배에만 쏟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여기서 잠시 왜 제대로 된 경제적 동기 부여 구조가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그러한 동기부여 구조를 평등주의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만약 모든 개인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과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반면 일을 안하고도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동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윤리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러한 간단한 예로부터 그러한 경제체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콤해 보이는 평등논리는 자칫 우리 경제의 예리한 차별화 능력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서둘러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우리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경제성장의 기본원칙들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든 경제학 관점에서 보든 우리가 논의한 성장의 원칙들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시장경제야말로 우리 인류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경험한 최상의 경제시스템이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바람직한 체제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 중 하나는 경제성장의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달리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200년 남짓할 뿐이고 아직도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 정치 시스템이다.

이 시점의 한국 역사에서 확실한 점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는 성장의 사다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뒤얽혀서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진정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면 모든 기본적인 전제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획일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에서 한 발 물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체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의 발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 과정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불균형은 불균형정책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세상이치(차별화)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인 이상(평등사상)에 기초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평등지향 민주정치가 한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다.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 그러한 개혁은 기회균등의 민주정치와 결과의 차별화를 수용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 2. Short-run versus Long-run Income Inequality

### 장단기 소득불균등에 관한 연구

: 김용성 (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1988년~1997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income inequality)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소득불평등을 항상적 요인(persistent factor)과 일시적 요인(transitory factor)에 따른 불평등으로 분해하였다. 일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달리 항상적 요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인 소득분포의 일면을 가늠할 수게 하며 이는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1988년~1992년과 1993년~1997년의 두 기간의 비교를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하였으나 항상적 요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소득의 이동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